

“年 어가소득 8000만원·귀어 2000명 목표”

해수부 수산·어촌발전 기본계획
고부가가치 어종 스마트양식 재편
빈집 리모델링 등 초기 정착 지원

정부가 5년 내 어가 연평균소득을 8000만 원대, 귀어·귀촌 인구를 연간 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식 체계를 고부가가치 어종 위주의 스마트 양식으로 재편하고, 청년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수산식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다. 1억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원까지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방침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

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할 계획이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제를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 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건설업 고용 줄고 보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6% 증가

지난해 국내 전(全) 산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6만6000명으로 2만7000명(-0.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0.8%) 늘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중소기업 고용 위축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보다 8만6000명(3.6%)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563개 제품 ‘부적합’

정부가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63개를 확인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제품 2025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식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K-푸드 수출 다변화 위해 할랄인증 지원”

재경부-한은, 국민·농협·신한 등
외환건전성 부담금 최대 60% 감면

올해의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총 7곳이 지정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organChase)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9일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이들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외되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새로 포함됐다.

선도은행 제도는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에 도입됐다.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

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선도은행으로 뽑히려면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 없음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평가는 ▲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 체결된 거래에 주간 시간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두바이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품목 중 하나로 할랄식품을 꼽았다. 또 K-컬처 등과 연계한 K-푸드 마케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UAE 정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 R&D(연구·개발), K-할랄식품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할랄식품 소비 인구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랄인증 한우, 딸기·포도 등의 프리미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지원,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안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UAE 기후변화환경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UAE 기후변화환경부의 안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또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美 350MW ‘루시 태양광’ 착공

35년간 전력 생산·판매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350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중부발전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콘초 카운티에서 ‘루시(Lucy)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엘라라(130MW), 콘초밸리(160MW)에 이은 중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다.

루시 태양광 발전소는 총 350MW 규모로, 2027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준공 이후 35년간 전력을 생산·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루시 태양광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판매할 예정이며, 연간 약 926GWh의 청정 전력을 생산해 약 2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기업 간 자원순환 돕는다

컨소시엄 최대 20억까지 지원

한 기업이 공정에서 쓰고 남긴 폐열과 부산물이 다른 기업의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되는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생태산업개발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41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과제당 평균 8억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 등을 다른 기업의 공정에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업 간 연계 모델을 발굴·확산을 목표로 한다.

컨소시엄은 ▲공정 부산물·폐열을 공급하는 기업 ▲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재자원화 자원을 활용하는 수요기업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설비 기업과 온실가스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익명제보가 접수될 경우, 피제보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보를 계기로 한 조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방식을 이처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